

4월 20일 열린 금속노조 157차 중앙위원회는 4월 27일 열린 62차 임시대의원대회 안건을 심의하여, 원안대로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임시대대 안건은 1) 조합 감사위원 보궐 및 보충선출 건 2) 조합비 회계공시제 관련 방침(안) 승인 3) 2026년 투쟁방침(안) 승인 4) 쟁의적립금 사용(안) 승인 5) 투쟁결의문 채택 등이며, 이번 정책해설지에서는 3번 안건중 올해 금속노조 과제와 요구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 금속노조 과제와 투쟁 기조

금속노조는 현재 정세가 해외 현지 생산확대와 AI 도입 등으로 국내 양질의 일자리가 축소되는 심각한 위기라고 인식하고, 취약한 내수 기반을 극복하는 방안을 정부와 자본에 요구하고 사회적 투쟁을 벌인다는 계획입니다. 자동차, 조선, 철강, 전기·전자 등 업종별로 과제와 요구를 수립하여 기업별 교섭과 투쟁을 넘어 업종으로 묶어 산업정세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집단적 교섭력을 높인다는 구상입니다.

금속노조는 한국사회와 노조 내부에서 점점 심해지는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안의 격차를 줄이는 노조운동의 전략을 마련코자 합니다. 개정 노조법 2조 시행에 따라 하청·자회사 노동자들이 기업 울타리를 뛰어넘어 진짜 사장과 '원청교섭'을 추진합니다. 기업별 교섭과 기존 중앙교섭·지부집단교섭에 더해 정부의 산업정책과 자본의 의사결정에 개입하기 위한 '초기업 교섭'을 병행하는 전략입니다.

이같은 정세인식와 과제도출을 통해 올해 금속노조 투쟁목표를 △ 모든 노동자의 고용보장 △ 초기업교섭 활성화 체제로 전환 △ 원청교섭 쟁취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투쟁기조는 △ 현재 금속노조의 유일한 초기업교섭인 중앙교섭·지부집단교섭을 중심에 놓고 △ 금속노조 다수의 산별교섭 불참사업장 단위를 조직하여 업종별로 묶어 공동투쟁을 벌이고 △ 원청교섭 투쟁을 통해 조직 안팎의 연대의 흐름을 만들어 사회적 위상과 지지도를 높이면서 △ 대정부 협의와 쟁점화 투쟁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 금속노조 단체교섭 요구

### 18만 단체교섭 공동요구

1. AI 도입 고용과 인권 보호
2. 비정규직 고용과 원청교섭권 보장
3. 초기업 교섭 활성화
4. 연금 수령 나이까지 정년 연장
5. 생활임금 보장

### 자동차 업종 공동요구

1. AI 관련 고용 및 노동조건 보장
  - 회사는 인공지능 등 도입할 경우, 최소 12개월 전 노조에 자료 제공
  - 노사 합동으로 고용·노동조건 영향 사전평가 후 고용안정위에서 의결
  - 고용안정위 심의·의결없이 해당 기술 도입 불가
  - 이미 도입된 기술은 자료 소급 제출하고 고용안정위 사후 심의
  - 사내하청, 협력업체, 공급망 노동자 노동조건에 대해서 노사 공동논의

### 철강 업종 공동요구

1. 철강 국내 생산 및 투자 확대
2. 정의로운 산업전환과 신속한 정보 공유, 현 인원 유지, 외주화, 자회사, 도급업체에 책임전가 금지
3. 불법파견 금지
4. 유해·위험 작업의 외주화 금지
5. 상시·지속업무 정규직화
6. 정규직 전환 특별협의체 구성

### 조선 업종 공동요구

1. 정규직 정년 퇴직 인원수 이상 정규직 채용 실시
2. AI 도입 고용과 인권 보호

## 금속노조 대정부 등 협의 요구

금속노조와 각 업종분과위원회(자동차, 조선, 철강, 전기전자)는 대정부 등 협의 요구안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 산업통상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각 사업장단체 등에 제출하고 사회적 쟁점화 투쟁을 전개한다는 계획입니다.

### 금속노조 및 업종(자동차·철강) 핵심요구

1. 업종·산업별 단협 효력확장 제도, 지역적 구속력 요건 개선
2. 초기업 교섭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 및 제도기반 마련
3. 산별노조 조직률 제고를 위한 요구

#### □ 자동차업종

- 완성차 국내 생산유지 확대, 국내 생산부품 사용촉진제 마련
- 국내 연구개발투자, 설비투자, 교육훈련투자 정부지원 확대
- 부당한 하도급 단가인하 근절, '납품대금 연동제' 제도 개선
- 국내 공급망·일자리 보호 노정·노사정 협의틀 구성

#### □ 철강업종

- 정부 및 사용자단체 산업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에 노조 참여
- 고용보장 및 정리해고 금지 원칙 명시
- 철강산업의 정의로운 전환 정책 마련